

유초중등교육 권한 이양 TF팀 가동

전북교육청, 내년 2월까지 정책·사업 전수조사, 이양 방안 모색... 전국 시도교육청 차원 TF팀도 운영

전북교육청이 현재 교육부로 집중돼 있는 유초중등교육의 권한을 시도교육감과 단위학교로 이양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규모 테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청협의회가 새 정부와 교육개혁 의제에 관한 공동 협의의 결정에 따른 준비작업의 일환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새 정부의 6가지 우선 교육과제를 ▲유초중등교육 권한

교육감과 단위학교에 이양 ▲혁신학교 전국 확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전환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원 행정업무 경감 ▲사립학교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등으로 정하고 사무국, 정책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이들 과제에 대한 세부내용과 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6개 과제 중 ▲유초중등교육 권한 교육감과 단위학교에 이양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TF팀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전북교육청 내 각 부서의 장학관, 사무관 등 76명으로 구성된 권한 이양 T/F팀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동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초중등교육정책과 사업을 전수 조사하고 이양 사무 선정과 이양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는 별도로 타시도교육청에서 2~3명씩 추천을 받아 유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전국 시도교육청 차원

의 권한 이양 TF팀도 전북교육청에서 운영한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이번 권한이양 TF팀의 특징은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이양 검토했던 틀다른 방식 즉, 중앙정부에서 이양대상 사무를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양 받는 주체, 즉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양 대상 사무를 검토하고 선정하는 실질적인 이양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해은 기자

민주당 조강특위 구성... 지선 속도

더불어민주당은 6일 조직강화특위(조강특위)를 구성하고 공식인 시도당 위원장 선출 방법을 결정하는 등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조강특위 위원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춘석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임중성 사무부총장, 민경한 윤리위원은 당연직으로 합류했다. 이외에 유은혜(경기)·전혜숙(서울)·박재호(부산울산경남)·박찬대(인천)·송기현(강원)·이기구(대전충남) 의원, 박해자(광주전남)·한범덕(세종충북)·김해정(대구경북) 지역위원장, 고성민 전국대학생위원장 등 13명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조강특위는 청와대 비서관 등으로 자리를 옮겨 생긴 사고당(지역위원장) 공식인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위원 구성은 추후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백해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성과 청년 등 의무 위원 비율이 있다"며 "여기에 각 지역에서 한명씩 들어가는 것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선거기획단과 정당발전위원회에 참여한 인물은 조강특위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현재 공식인 시도당 위원장의 선출방법도 결정했다. 시도당 위원장은 각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선출하되, 대표성이 보장되는 경우 해당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당세 취약지역의 경우 조강특위에서 단수추천을 거쳐 최고위에서 임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충북·경남은 해당 지역 상무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며, 대구·경북은 조강특위에서 단수 추천한 뒤 최고위에서 임명하기로 했다.

또 입당·복당·전직 등 당원자격을 심사할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구성도 완료했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이춘석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해영·김해영·남인순·임중성 의원, 이수진 전국노동위원장, 조영민 윤리위원 등 7명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뉴시스



붉은 표정으로 악수 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공동 언론발표를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보 거짓 공개·은폐 시 처벌 추진

김관영 의원,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공공기관이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은폐를 목적으로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6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정부 공무원들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은폐할 목적으로 공개를 거부 또는 부분 공개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정보 은폐를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

용을 신설했다.

김관영 의원은 "국민들에게 정보공개청구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써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에 공공기관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에 한해 처벌조항을 신설해 정보공개청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군내 동성에 행위 처벌 관련 민주당 입장표명 촉구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을 포함한 조배숙, 이동섭, 장정숙, 최도자, 최명길 의원 등 국민의당 국회 의원 6인은 6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군내 동성에 행위 처벌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 등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군내 동성에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때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며, "요즘 국민의당 의원들은 동성에 합법화에 반대하는 국민들로부터 하루 수천 통의 '김이수 반대'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 등은 "그러나 정작 문자폭탄이 투하되어야 할 곳은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와 시종 찬성 입장인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비난은 피하면서, 인준이라는 과실만 취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 등은 "민주당은 '군형법 92조의6이 위헌'이라는 김 후보자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군내 동성에 행위 처벌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정동영 "부영, 화성동탄 입주인에 피해보상 해야"

정동영 의원은 5일, 8만8,381건의 하자민원이 발생한 화성시 동탄에듀밸리 부영 사립으로 아파트를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열고 하자해결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국회의원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흥, 4선),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초선)이 함께했다.

화성동탄 부영아파트는 사전 입주 전 4만7,000건의 하자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10월까지 9만 3,000건, 하자 보수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10만 건 이상의 하자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했다.

화성동탄 부영아파트는 입주 6개월 만에 아파트 외벽과 주차장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오수관이 터지는 등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안전 문제도 심각했다. 한 입주민은 "사람이 지나가다 오수관이 깨졌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등하교 길에 지나가다 그곳에 빠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지적했다. 그는 "주민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은 공사를 어떻게 했겠는가?" 반문했다.

정동영 의원은 "아파트에 들어오는데 '날마다 공사판' 이라적인 현수막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며 "1,000여 세대 아파트에서 8만8,000건의 하자가 접수됐다는 건 세계 기록인 것 같다. (화성동탄 부영아파트에서) 상식을 벗어난 하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완벽한 하자보수를 제공하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며 "하자보수만으로 책임이 다 되는 건 아니라 생각한다. 정신적, 재산상, 물질적 피해보상도 부영은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영 측 입장을 물었다. 부영 측 관계자는 완벽한 하자보수 문제에는 동의했지만, 피해보상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동영 의원은 "2,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살 때도 선분양을 하지 않는다"며 "주택보급률이 70% 밖에 안 되고 집은 부족하고 정부에 돈을 없을 때는 선분양제를 통해서 주택보급을 촉진시킬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상태에서 3억, 4억, 5억짜리 물건을 눈으로 보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구매와 판단을 강요하는 선분양 시스템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분양위가 공개해야 한다"며 "아파트 지을 때 원가가 얼마 들었는지 소비자들이 알고,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서울 SIF공사는 이미 분양원가 공개를 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분양원가 공개하게 되면 민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문제 해결에 근본 대책인 점을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14살 소녀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한 학교에 행복한 교육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영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시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